

안보통일센터

한·미 정상회담 평가와 분석 ②

한·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 전망

2017. 7. 5



SECURITY
FOCUS

안보포커스



재단법인
여의도연구원
THE YEUIDO INSTITUTE

1. 한미정상회담 총괄평가

□ 한·미 정상간 상견례 수준의 회담

-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정상간 우의를 다지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
- 총론 합의, 각론 異見의 가능성이 잠재된 ‘절반의 성공’을 이룬 회담
※ 이와 달리, 한·미 공동성명은 형식적인 ‘수사적 표현’일 뿐, 무게 중심은 트럼프대통령의 대북 정책의지 및 무역문제의 미국 주도권을 확인한 회담이라는 평가도 있음(英 가디언紙 7.1)

□ 實利[현찰]를 내주고 名分[어음]을 얻은 회담

- 미국에게 내준 實利 : 한·미 FTA 재협상, 방위비 분담금 증액
- 한국이 얻은 名分 : 한국의 남북관계 주도적 역할, 북핵문제의 단계적 접근 및 제재 속에 대화 병행

□ 안보는 공감, 경제는 異見

-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 부여 재확인은 성과
-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무역불균형 개선 등의 숙제 부과

□ 한중관계에 있어 우리정부의 부담 가중

- 사드 배치에 관한 입장 표명이 없음으로써 한·중 갈등 내연
- 한·미·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 증진 재확인

2. 향후 예상되는 주요 쟁점

□ 북핵문제 해결과정

- CVID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공동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
-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가운데, 트럼프대통령은 對北 압박과 제재에 방점을 두면서 대화에는 조건을 붙임
- ‘올바른 여건 아래(under the right circumstances)’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함으로써, 文정권이 對北 대화에 방점을 둔 것과는 달리 ‘올바른 여건’의 대화시점을 둘러싼 논란 소지
- 文대통령의 ‘(입구)先동결, (출구)後폐기’의 경로에서 취할 검증방법과 조치의 수준 및 각 단계별 북한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논란 소지
-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의 조응문제

□ 한국의 ‘주도권’ 범위

- 한반도 통일(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)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는 미국의 전통적 입장
- 그러나,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미국 안보와 쏠세계의 핵확산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미국 입장
- 그러므로, 평화통일 환경 조성과 북핵·미사일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권 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

□ 방위비 분담금 증액

- (트럼프대통령) “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,” “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”고 강조
- 공동성명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, 국방부(7.3)는 “‘합리적 수준’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협의할 것”이라며 분담금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느낌

□ 한·미 FTA 재협상

- 공동성명에는 ‘한·미 FTA 재협상’이 직접 언급되지 않고 ‘공정한 무역 발전’을 위한 합의사항으로 반영
- (한국)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, 양측 실무진이 한·미 FTA 시행 이후의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·조사·평가할 것이라는 입장
- (세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) “트럼프대통령의 지시로, 무역대표부 (USTR) 라이트 하이퍼 대표는 FTA 협정을 재협상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‘특별공동위원회’를 소집할 것”
 - ※ 김경수(민주당 의원) 페이스북, “트럼프대통령이 한·미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고 한·미 FTA 재협상을 통해 이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.”

□ 사드 배치

-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리지 않기로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보이지만, 갈등은 여전히 內燃

- 文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의 번복이 없음을 재확인(CSIS)하면서, 다만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한·미·중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
- ※ 환경영향평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것인지,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모호,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사드 배치 不可 명분이 제공될 수도 있음

3. 향후 한미관계 전망

□ 공화당과 트럼프대통령의 북한觀 유념

- 美 공화당 政綱에는 북한을 ‘노예국가’로 규정하고 있고,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정권을 ‘잔혹한 정권’으로 비난
- 美 공화당 행정부의 레이건대통령(1980년대)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 국가들을 ‘악의 제국’으로, 부시(Jr)대통령(2000년대)은 북한을 ‘악의 축’으로 규정하여 ‘제거(붕괴)대상’으로 보았음에 주목

□ 압박과 제제가 강화된 대북정책 지속 전망

- 트럼프행정부의 對한반도 정책 조직과 정책내용 정비와 함께 한국의 남북관계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‘당분간은’ 대북 강경책을 유예할 가능성
- 그러나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중·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時 미국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다리지 않고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 전망
- 트럼프대통령은 강경한 대북인식과 함께 오바마행정부의 ‘전략적 인내’ 전략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, ‘적어도’ 트럼프행정부 초기에는 ‘최대한의 압박과 관여’의 틀 속에서 대북정책 지속 전망

- 다만, 미국의 對중국 압박카드로 북핵문제가 활용되므로 미중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대통령의 협상스타일에 비추어 미북관계의 반전 가능성 주목

□ 남북관계 ‘주도권’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文정권의 비용 지불 가능성?

- 국제정치현실에서 ‘주도권’ 확보는 비용지불이나 압도적 무력행사로 가능하므로,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위해 미국에게 상당한 규모의 대가 지불 개연성 충분
- 이 점에서 한·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약속 및 사드 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의 연계성 등이 의심됨
- 설령, 북한이 북핵협상에 나와 ‘先동결, 後폐지’를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‘주도권’을 가진 한국이 북한에 대한 보상을 거의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
※ 1994년 경수로 제공時 비용분담사례 참조

□ 금년 하반기 이후 한·미간 마찰

- 2019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이 금년 말에 시작되고, 내년에는 FTA 재협상, 저작권 조기 전환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협상의 시작으로 남남갈등은 물론이고 한·미간 마찰로 확산 가능
- 고도화되는 북핵·미사일 문제의 해결방법을 둘러싼 한·미간 마찰

□ 文정권의 남북 대화·협력 조급증으로 인한 갈등 증폭 가능성

- (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갈등)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文정권의 남북 대화·협력 조급증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을 와해시키고 오히려 한국이 역풍을 맞을 수 있음

- (남남갈등 심화) 文정권의 ‘한반도 평화시대’를 열겠다는 과욕과 목전에 둔 김정은정권의 핵·미사일 개발 완료 사이에서 대북인식과 접근법을 둘러싼 남남갈등 심화 우려
 - ※ 文대통령 귀국인사(7.2), “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,” “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.”

- (남북갈등 지속) 북핵과 북한정권에 대한 양 정상의 강경한 입장이 확인됨으로써 북한의 반발과 함께 남북 갈등 지속
 - ※ 北 조국통일민족전선(7.4), “... 남조선에서 개혁을 표방하는 새 정권이 들어선 오늘에도 통일문제와 북남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진 것은 없으며 따라서 북남관계의 전도 역시 낙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”며 한미정상회담 후 부정적인 첫 반응을 보임